사회정의와 기후변화

“어딘가에서 불의가 행해지면 이것은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의에 대한 위협이다. ...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옥중 서간에 나오는 말이다. 그만큼 세상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라도 불의가 저질러지면 이는 자신에게도 저질러질 것이므로 결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렇다!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은 항상 분쟁과 탐욕으로 얼룩지고, 결과적으로 오래 갈 수 없다. 성숙한 사회는 사람들끼리 생기기 마련인 이해관계의 충돌을 정의롭게 해결하는 합의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의란 결국 “공평(equity)”의 한 형태로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합의에 근거한 평화적 해법을 이끌어내는 동인이라고 하겠다.

흔히 공평은 두 개의 차원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세대간 (intergenerational) 공평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공평이다.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지구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공평함을 뜻한다. 다른 하나는 세대내(intragenerational) 공평으로 현재를 사는 사람들 사이의 공평이다. 이런 두 측면의 공평이 모두 지켜질 때 비로소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공평의 원칙은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1992년 『UN기후협약(UNFCCC)』을 보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동의 책임이란 기후변화가 인류 전체의 관심사이므로 각국이 모두 기후협약을 준수해야 함을 천명한 것이고, 차별화된 책임이란 기후변화에 기여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 책임의 경중이 다르고 기후문제를 다룰 역량이 차이가 있으므로, 각국의 처지에 맞게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평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우선 기후변화는 그 자체부터 공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불공평하다. 공간적으로 보면,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오르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자연의 삶을 지켜오면서 인위적인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한 적이 없는 투발루 같이 태평양 작은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다. 이들은 섬이 바다에 잠기면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데, 2050년까지 이들 기후난민의 수가 2억5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또, 방글라데시에서는 7천만 명이나 홍수나 해수면 상승으로 직접 영향을 받을 운명이라고 한다. 기후변화의 직접적 피해가 이런 취약한 지역에 훨씬 더 치명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보아도, 26억에 달하는 개도국 주민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농수산업에 의존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이나 건강에 대한 위협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집중되고 있다. 즉, 기후변화의 피해가 지구 온난화를 만들어온 선진국과 부자들보다 전혀 그렇지 않은 후진국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크게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공평은 기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협상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2011년 더반 당사국 총회에서 2015년까지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새로운 감축안에 합의하여 2020년부터 시행하자고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 합의는 나오지 않고,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가장 많은 미국과 최근 배출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 등 신흥개도국 사이에 공평한 부담을 둘러싼 설전만 지속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과 도서소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들은 사실 상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들 강대국의 합의에 목매달고 있고, 사회적 약자인 원주민이나 후진국 여성들의 주장은 아예 대변할 기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는 사이에 대기 중의 온실가스는 이미 400ppm을 넘어 지구 온도를 2℃ 이하로 안정화시킨다는 코펜하겐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공표된 『기후변화정부간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제5차보고서(AR5)》 시안을 보면 2003-2012년 지구의 평균 온도는 1850-1900년에 비해 0.78℃ 상승하였는데 해가 갈수록 그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산호초가 죽어 결과적으로 5억여 명 어부들의 생계가 위험하다고 한다. 또한 이상기후도 잦아지고 강력해져 2012년 미국에서만 110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와 3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렇게 가면 지구 온도는 2100년이 되면 4℃ 이상 오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 가지 희망은 공평의 원칙에 근거한, 강대국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의 기후협약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30일 전 아일랜드 대통령 매리 로빈슨(Mary Robinson)과 『세계자원기구 (World Resource Institute, WRI)』 회장인 앤드류 스티어(Andrew Steer) 등이 주축이 되어 발표한 “기후정의선언 (Declaration on Climate Justice)”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밖에도 『기후캠프(Climate Camp)』, 『기후정의행동 (Climate Justice Action)』, 『Climate Justice Now』, 『Focus on the Global South』, 『Rising Tide』 등의 단체가 기후정의를 표방하고 활동 중이며,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ERES, 『뿌린대로재단 (As You Sow)』 같은 민간단체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기후문제의 조속한 해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사회정의를 글로벌 차원에서 실현하는 국제적 합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전 인류가 하루빨리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 하나뿐인 우리 지구와 그 위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을 살리는 대전환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